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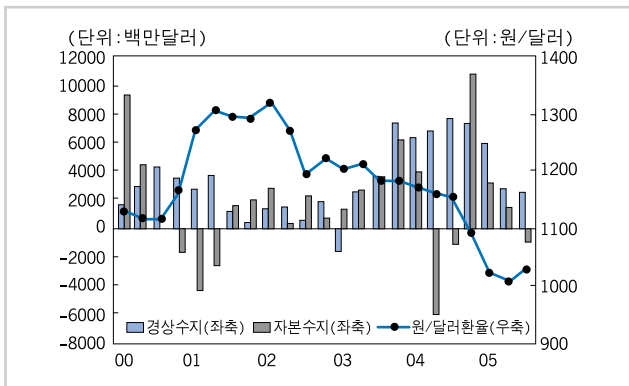
# 최근 발표된 해외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평가

李 兪 錫 (研究委員, 3705-6274)

최근 정부는 원/달러 환율의 급락에 대처하여 해외투자 촉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원/달러 환율 하락 요인을 곧바로 진정시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환율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한편 동 방안의 실시로 외환유출도 용이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됨.

- 최근 수년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자본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환의 초과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이는 원/달러 환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.
  - 2002년 이후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외환의 초과공급이 심화됨에 따라 원/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함.
  -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는 357.7억 달러로 2001년의 46.4억 달러에 비해 무려 7.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5년 1~11월중에도 173.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.

〈표 및 그림〉 경상수지, 자본수지와 원/달러 환율추이



	경상수지 (억 달러)	자본수지 (억 달러)	국제수지 (억 달러)
2000년	122.5	121.1	243.6
2001년	80.3	△33.9	46.4
2002년	53.9	62.5	116.4
2003년	119.5	139.1	258.6
2004년	281.7	76.0	357.7
2005년	161.3	12.4	173.7

- 원/달러 환율 하락은 중소기업의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외환의 초과공급은 통화정책 수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외환의 초과공급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외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음.



- 이번에 발표된 해외투자 촉진 방안의 주요 특징은 해외직접투자의 완전자유화와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자유화로 나눌 수 있음.
  - 우선 개인·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현행 300만 달러인 투자한도를 1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였고, 특히 금년중에는 투자한도를 폐지하여 해외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함.
  - 또한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, 취득금액도 현행 50만 달러(송금기준)에서 100만 달러까지 확대하고, 순수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.
  
-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지원확대방안을 발표하였음.
  - 수출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선물환 변동보험은 일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달리 증거금예치와 높은 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, 이를 통해 기존의 소극적인 환리스크방어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적극적인 선물환거래가 가능하게 함.
  - 또한 금년부터는 환율변동 확대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'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'이 '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'에 제한없이 지원될 계획이므로 향후 수출기업이 수출보험공사의 계약체결한도액 부족으로 동 보험가입에 제한되는 일이 없게 됨.
  
- 해외투자 촉진방안이 당장 원/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나 장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  - 2006년중에도 수출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의 초과공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환의 유출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원/달러 환율 안정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함.
  -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외환거래도 함께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선사항중 하나인 외환거래량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  
- 정부의 해외투자 촉진방안은 해외투자를 위한 외환수요 증대로 외환의 초과공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외환의 유출도 동시에 용이해짐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됨.
  - 해외투자 촉진방안과 함께 2006년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외환유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.
  - 이와 같이 사전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환투기 등 잠재적인 불안요인에 대한 감시 및 감독강화를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.